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성공조건

이 글은 지난 12월 18일 한국에너지협의회/동북아에너지포럼 주최 『동북아 에너지 민간포럼』에서 최기련 한국에너지공학회 회장의 특별강연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1. 지역경제 통합의 성공을 위한 논리

미래 사회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체제 아래 전개될 것이다. 이는 향후 경제운용제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작용원리에도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 50여 년간 남북 분단시대” 고립된 섬“형태의 관행과 인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을 찾는 방안으로 우리 주도의 동북아 경제통합추진의 단초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통합이란 Myrdal이 말한 것처럼 “기회균등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질서와 관습을 초월하는 새로운 규범(norm)을 형성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동북아 중심 국가라는 새로운 규범이 상이한 개별 목표를 조정,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가 선도하는 경제통합은 국경의 제거라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이익공동체의 영역확장이라는 논거를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성공논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내지 에너지공동체 구성의 성공과 발전전략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논리를 제창하는 근본적 이유는 수출 등 “대외 지향적” 성장논리가 한계를 보임에 따른 것이다. 세계 규모의 제조업분야 조립, 가공능력을 보유하였지만 성장의 한계가 노정되

었다. 이는 바로 “규모의 경제”의 한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는 제품 차별화와 유연성 부족, 기업 내부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 능력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경험한 여러 이유 중 하나도 “규모의 경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 문제 보정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규모의 경제 한계를 “보정”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지역경제통합” 논리로 선택하였다.

네트워크 효과는 시장참여주체들이 과거 경험이나 주관적인 예측을 통해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component)의 향후 가격, 품질, 시장점유율, 이윤 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며, 이 기대는 결국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경쟁력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심각한 경쟁상황에 직면한 경제주체들은 네트워크시장에서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 문제해결을 선도하는 자가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일상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제품선택 시 가격이나 품질이외에 미래 시장주도 가능제품이 선택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윤 확대보다는 시장점유율 제고에 힘쓰는 이유이며 우리 경제의 고질적 취약점이 바로 그것이다.¹⁾ 이에 경제통합이나 네트워크 경제의 성패 결정요인으로 1)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expectation) 2)경제주체간의 협력 3)제품 간 호환성, 표준화 가능성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동태적 기술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며 “공유 가능한 이윤창출” 메커니즘의 제시를 선도하는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에너지 부문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논의의 주요 논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동북아 에너지협력/공동체 구성은 뒤늦은 “규모의 경제 효과”에 대한 “환상”에 근거하지 않는가?

2. 지역경제 통합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본 동북아 에너지협력

우리가 주창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추진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인천 등의 경제자유지역 건설이다.

경제자유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개방경제시대 우리나라의 일정 부분을 개방하여 네트워크 경제의 한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외자 유치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여러 현안문제들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들이다. 그러나 현 우리 여건상 그 성공은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해결과제가 누적되어 있다. 이들은 과거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개발이 요구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안 지역갈등이나 노동계 반발 등은 지역적 문제라고 간주해야한다. 그보다 인천, 부산, 광양이라는 지역이 세계차원 네트워크 경제구축 과정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논리개발이 시급하다.네트워크의 범주를 축소하여 동북아지역으로 한정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립된 섬” 논리를 극복할 비상한 노력과 혜안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는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은 자원과 시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 러시아를 그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더욱 복잡하여진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 더욱이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해결과제를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거 “고립된 섬” 논리에다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가세한 최악의 상황이다. 인천 송도지역의 경우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것이지만 물류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순한 항만기능 고도화를 위한 일에 온 나라가 시끄러울 이유는 없다.

더욱이 인천시가 제시하는 계획은 한 마디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오해가 걱정된다.²⁾ 송도라는 미개발지역에 중앙정부 지원(즉, 온 국민의 세금)을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내용 위주이다. 한 마디로 부가가치의 차별화/고도화 전략이 없다. 외국인에게 공간을 제공하기만 하고 그들이 무엇을 통해 더 많은 이득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이 이득의 일부를 주변국에게 할당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이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땅장사리는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 외국투자자들을 일본이나 중국 지역에 비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아래 유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우리 송도지역이 성공할 경우 그들에게도 이득이 있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이래야만 노조 등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핵심은 경제자유지역이 낼 수 있는 더 큰 부가가치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답은 궁극적으로 기술혁신일 것이다.³⁾

송도지역의 경우 테크노폴리스 건설과 해외 저명 연구기관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1) 규모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품질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direct network effects)와, 동일한 네트워크 참여자 숫자가 많을수록 보완적 부가혜택이 증가하는 간접 네트워크효과(indirect network effects)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네트워크의 “외부성”으로 규정된다.

2) 부산이나 광양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안) 부재로 기본 자료입수가 가능한 송도지역 만을 언급함. 따라서 송도지역을 특별히 폄하할 의도가 있지 않음.

“판장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세계적 기술경쟁 속에서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외 기업이 필요한 어떤 기술을 어떤 개발전략을 통해 언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IT, BT, NT 등 지금 유행하는(?) 모든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계획만이 있다. 그래서 대덕 연구단지가 반발하는 것이고 송도의 발전은 결국 외국인 손에 맡기는 셈이 된다. 우리가 제공하는 기술혁신 정보를 탐내는 외국투자자들이 몰려오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입지 분양형 자유지역 추진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천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술혁신능력이 송도에 집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송도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혁신정보 전달이 가능한 쌍방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된다. 따라서 송도지역 지역혁신(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을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집 짓고 도로 내는 인프라 조성은 인천시 주도로 가능하지만 그 운용은 국가단위 전문가 조직(NES ; National Expert System)에 의해 국가혁신시스템(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차원에서 운용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부산이나 광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들에게 송도에 투자하면 다른 나라와 달리 NIS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송도지역 성공의 두 번째 조건은 선택과 집중전략의 추진이다. “판 장사” 관점에서는 누구나 먼저 가능하면 초기투자가 많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경제통합을 주(선)도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분양(?)은 안 된다. 투자업종을 구체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혁신정보를 거국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제공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 간 경제 분업체제 적정화 구도를 상정하고 무엇이 우리 주도로 가능

할 것인가를 심층 검토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중간 투입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송도 지역 육성을 제외하며 과감한 관련기술혁신체제 도입을 송도지역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실행방안을 제의한다.

3. 중간 투입제 산업혁신전략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있어 일본경제가 최첨단기술과 자본동원능력에 의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에 대응할 뿐 아니라 중국이 풍부한 생산투입요소(인력, 원자재) 부존과 막대한 시장 존재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우리를 압박한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이에 많은 선행연구에서 우리는 세계 제조업 기지로 발전하는 중국시장에 고부가가치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전략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이 공급하는 부품, 소재는 중국의 범용상품 제조보다 그 자체로서 글로벌 수요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술혁신 능력이 집적된다면 중국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송도지역을 첨단부품, 소재산업 육성기지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중간 투입제에는 부품, 소재 이외 에너지제품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에너지소비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다. 북한 역시 조만간 에너지소비가 급증할 것이며 상당 부분 우리가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송도지역을 동북아지역 에너지 교역과 연구중심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구성 전진기지로 송도 지역 활용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유럽 경제통합의 사례에 비추어 국경을 쉽게 넘는 균질 재화인 에너지 시장통합이 경제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북아 에너지시장통합은 관련 국가 모두에게 추가 공유가능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⁴⁾ 이에 국가차원 RIS지원체

3) 각종 편의나 특혜제공은 초기단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 효과가 기술혁신정보 제공에 뒤질 수 있음

재에 기반을 둔 부품, 소재산업부문 외자 유치와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추진의 실무책임을 송도지역에 부여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앞에서 언급한 (1) 네트워크 경제에 대한 이해와 국민설득, (2) NIS체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송도지역 RIS 운용체제 고도화 (3) 과도한 지역이기주의 억제 (4) 인천지역 RIS 능력의 재검증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4. 현안 에너지문제의 개요

최근 에너지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공급부족과 같은 전통적 이슈보다 에너지와 사회와의 연계과정에서 일어나는 속칭 “외부효과”(External Effects)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문제, 북한 경수로 건설문제, 화물연대파업과 경유가격 인하 문제 등 과거와 다른 주제들이다. 따라서 급변 들어 국제석유가격이 이라크전쟁 여파로 급등하고 월간 원유수입대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거의 10억 달러가 증가한 30억 달러 수준에 달해 국제수지 방어에 큰 문제로 등장하여도 관심을 끌지 못 하고 있다. 엄연한 사실은 유가 1달러 상승은 경상수지 9.5억 달러 약화, 물가 0.1% 상승, GDP 0.05% 저하를 유도하여 적정 유가수준인 20-22달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주요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처한 최악의 경제 환경은 반도체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일 것이다. 올해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아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국제유가의 엄정한 분석보다 이라크전쟁 추이에 따라 유가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였다.

이러한 에너지문제 대응의 한계가 발생한 근본 요인은 무엇보다 국제화, 개방화 등 변화된 여건에 부

응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체재 정립의 지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과거 체재와 사고(思考)의 탈피 지연에 기인한다. 한 마디로 과거 에너지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수익이 정부에 의해 보장된 산업이라는 관행이 변화된 현실에 정확하게 투영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탈피해야 할 관행과 인식은 ;

첫째, 저가, 안정수급 우선정책의 불가피성 ;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부존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값싼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값싼 투입 원자재 조달 차원에서 에너지확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 아래 국산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준비(기술개발 등)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 ; 남북 분단 상황에서 우리 에너지수급체계는 주변국과 고립된 “섬”형태로 안보관점에서 에너지문제를 고려해야 했다. 특히 지난 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안정 확보문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초월하는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 결과 석유부문에서 “소비지 정제주의” 원칙과 전력부문에서 과도한 예비율 확보 등 일부 과잉투자가 불가피하였으며 공기업 형태의 에너지사업 추진 원칙이 강조되었다. 또한 해외의존 증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연탄 등 일부 국산에너지의 경우 경제성을 초월한 정부보호 등 시장경제원칙이 일부나마 무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정부보호에 의한 초과이익의 창출은 가격구조 왜곡을 조장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안정된 세수(稅收) 확보에 활용하는 등 무리한 추가 정부개입을 당연시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정부통

4) 최기련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문부출판사, 1997에서는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연대를 통해 수입의존도를 감축하고 청정개발체제로 이행하여 경제통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음.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사업보고서(각 년도)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꾸준히 검증, 제시하고 있음.

제를 통한 안정된 수익보장과 독점적 지위유지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합작으로 초과이윤을 배분받는 수혜구조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외곽누적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과정에서 에너지 부문이 어느 부문보다 큰 진통을 겪게 하고 있다. 이 진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 각자가 그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만이 주어지는 경제정의 확립과 그 전제조건인 정부규제완화/철폐를 완전 수용하는 원론적 개혁이 요구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 여건상 일정 부문 에너지의 공익성 범주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부문은 공익성과 기업성이 조화되는 에너지산업 개혁 “로드맵”(Road Map)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개혁과제를 졸속 시행하는 과오를 회피해야 한다. 공익성이 크고 초기 거대자본투자 및 장기투자선행기간이 요구되는 에너지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야만 각 경제주체는 엄정한 경쟁원칙 아래 「경쟁과 협력」기회창출을 통한 성장과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에너지시스템의 특수성에 근거한 규제철폐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정책을 의미있는 수준에서 적정화하고 있다. 유가 자유화조치와 전력산업 구조개편정책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정부정책 기조전환에 못 미치는 시장원리도입과 적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우리 에너지산업은 경쟁의 법칙과 효율적 자원배분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學習)기회를 갖지 못한 가운데 선진경제체계에 적응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5.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전개방향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근간은 생산과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효율」의 극대화”를 주요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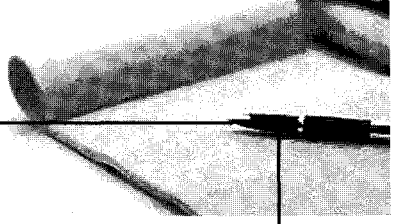
하고 있다. 즉, 에너지산업의 환경친화적 요소 강화와 과감한 진입자유화와 그리고 “합리적” 공급확충으로 요약된다. 또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산업 육성」이 장기 정책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체제 도입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그러나 장기 정책목표 설정의 당위성과 현실의 조화과정에서 필요한 조치, 예를 들어 투자지원 확보와 준비기간의 인정 등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더욱이 우리 에너지산업 부문이 내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외부에 알리고 자기개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에너지부문이 취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정부보호와 지원의 철폐를 당연시하는 경제원리로서의 회귀이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제품의 외부효과(환경파급효과 등)를 내부 비용으로 포함하는 본격적인 시장/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대비이다. 이러한 구조개편은 시장경제원리의 당연한 귀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역할의 강화로 반사이익을 향유해온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효율적 에너지 공급의 확충」이라는 정책원칙이 강조하는 「효율적」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 개념은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도 민간 창의력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범위 내에서만 국내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에너지공급 불안이 야기하는 속칭 「회피비용」(Avoid Cost)부담을 핑계로 한 경쟁 제한적 과거행은 통용될 수가 없다. 「효율」이란 용어는 원론적으로 「다른 부분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자원배분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되고 있음을 유의한다면 큰 방향의 정책전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전력 수급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같은 지금까지 국가주도 계획이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단일 내지 소수의 독과점 공급업체가 계획의 수혜자가 되고 전 국민(즉 모든 소비자)이 「선택 불가능한 소비자」입장에서 공급원활화 시책을 지원하는 사례는 장기적으로는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내 에너지 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시장진입을 허용/유도하는 경쟁전략의 대폭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경쟁과 협력」원칙의 시행이며 새로운 기업전략의 원형이다. 이에 시장 개방 시의 대내 압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국내기업간 전략적 연대(Strategic Alliance)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② 시장개방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공급시장 진입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다수의 실수요자가 공급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과 함께 국가단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과다한 투자압력을 저감시킬 수 있다.

이에 가스/전력부문에서의 실수요자 시장진입은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산업체들은 「공공성」과 「기업성」 두 가지 경영원칙 가운데 중점분야를 선택하고 이에 따른 구조개편 등 과감한 전략수정이 요구된다.

③ 대내외적 경쟁상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창의성 제고만이 유일한 경쟁력확보 대책이다.

이에 우리 고유의 문화적 배경에다 기술혁신(Innovation)능력을 추가하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기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정책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기술의 공공성을 구실로 한 민간기업의 무임승차(Free Rider)적 기술혁신 결과의 수용 태세 역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④ 에너지시스템 차원에서의 에너지부문의 총체적 의견 집합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

에너지 산업계는 아직 정부규제에 순응하는 것이 이익보호의 첩경이라는 인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의 시책방향은 이미 「경쟁과 협력」체제 근성과 창의성 위주의 선별적 육성보호원칙을 근간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익성 추구하고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등 에너지시스템 차원에서 고려할 정책도구들이 실종되고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전력부문 구조조정은 가스, 지역난방, 석유, 석탄 등 여타 에너지부문의 수급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각자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전체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도구가 없다. 더욱이 이제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에 즈음하여 부문별 산업육성보다는 종합에너지산업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석유, 가스, 석탄, 전력부문의 특화된 부문정책의 차별성은 조만간 종식될 것이며 마땅히 종식되어야 한다. 에너지부문의 총체적 합의에 의한 시스템 차원의 효율화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정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동북아에너지협력/공동체 구성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필요한 논리는 위에서 언급한;

- (1)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즈음하여 부문별 산업육성보다는 종합에너지산업육성이 필요하다”라는 구절과
- (2) “특화된 부문정책의 차별성은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언급과
- (3) “에너지부문의 총체적 합의에 의한 시스템 차원 효율화 전략 추구”가 우리 에너지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과연 우리 에너지산업계가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주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문 이기주의 탈피를 다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를 감히 요청드린다.